



중소기업 ESG 대응전략

3. 중소기업 ESG 관련 법적 리스크 및 대응



중소기업의 ESG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와 대응방안



주요 내용

ESG란 무엇인가?

왜 ESG가 문제인가?

ESG, Supply Chain에서 위기와 기회

ESG 경영을 통한 선제적 Risk 관리

ESG의 주요 Legal Issues

중소기업의 ESG 관련 주요 법적 대응

The logo consists of the letters 'ESG' in a bold, white, sans-serif font, centered within a solid blue rectangular background.

ESG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 ☑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
- ☑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는 것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생존마저 위협받는 현대사회**



기업의 현재 실적만을 고려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인류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중점**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지속가능성

- ☑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지속가능발전

- ☑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투자자, 소비자 인식 변화

수익성 → 수익성 + 착한 기업

-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한국전력 투자금지”,
금융회사들의 “탈석탄 금융”, “기후금융” 선언
- ESG를 추구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음

투자자, 소비자 인식 변화

수익성 → 수익성 + 착한 기업

-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한국전력 투자금지”, 금융회사들의 “탈석탄 금융”, “기후금융” 선언
- ESG를 추구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음



기업의 ESG 경영여부가 기업의 리스크 판단의 기준

- 투자 Risk를 줄이기 위해 대상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도 검토, 분석
 - ESG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 축소
- 소비자들이 그 기업의 제품을 외면할 경우 거래관계의 기업들의 거래 중단 등 공급망에서 배제됨으로써 기업가치 하락

투자자, 소비자 인식 변화

수익성 → 수익성 + 착한 기업

-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한국전력 투자금지”, 금융회사들의 “탈석탄 금융”, “기후금융” 선언
- ESG를 추구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음



기업의 ESG 경영여부가 기업의 리스크 판단의 기준

- 투자 Risk를 줄이기 위해 대상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도 검토, 분석
 - ESG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 축소
- 소비자들이 그 기업의 제품을 외면할 경우 거래관계의 기업은 거래 중단 등 공급망에서 배제됨으로써 기업가

생존의 문제
(must-to-do)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ESG



환경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삼림 및 생태계 보호,
각종 유해화학물질 규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ESG

파리기후협약(2015년 12월)

-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
-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
-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토록 함
-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 협정의 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포함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ESG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단계적 시행(2022년)

<p>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p>	<p>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p>
<p>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p>	<p>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p> <p>②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p>
<p>제23조(기후변화 영향평가)</p>	<p>① ...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p>	<p>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설정·관리하여야 한다.</p>
<p>제29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ESG

Supply Chain에서의 요구사항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대기업

공급제품에 관하여 탄소배출량 측정 요구, 저탄소 인증 요구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ESG

사회

강제노동, 성/인종 차별 등 금지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ESG

예 1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면화(제품) 수입 금지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태양광패널 원료) 수입금지

US Firms Must Cut Ties to Xinjiang Due to Extensive Forced Labor, Lack of Due Diligence: Experts

The only way for companies to avoid complicity is to pull out of the region altogether, they say.

By Joshua Lipps
2021-03-10

Tweet Share 294

Email Comment Share Print



Farmers pick cotton in a field in Xinjiang's Hami prefecture, in a file photo.

The only way U.S. apparel brands and retailers can ensure they are not complicit in forced labor in China's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 (XUAR) and are complying with U.S. law when they import apparel is to cut supply chain ties to the region, experts told a Washington hearing Wednesday.

Biden administration bars imports of solar panels linked to forced labor in China's Xinjiang region

The prohibition is likely to complicate the U.S. push toward more clean-energy generation



The Biden administration banned the import of solar panels and other goods made with materials produced by a Chinese company that it accused of using forced laborers from China's Xinjiang region, a move likely to complicate the U.S. push toward clean energ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ssued a withhold release order Thursday barring silicon-based products from the company, Hoshine Silicon, which operates from plants in Xinjiang that have been connected to coercive state labor programs targeting Uyghurs and other minorities, as The Post reported on Thursday.

*source : RFA (Radio Free Asia), 2021.03.10., By Joshua Lipps
<https://www.rfa.org/english/news/uyghur/labor-03102021183956.html>
 The Washington Post, June 24, 2021, By Lily Kuo and Jeanne Whalen
<https://www.washingtonpost.com/technology/2021/06/24/china-solar-forced-labor-imports-custom/>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ESG

예 2 아프리카 남서부 지역 카카오 농장의 아동노동

- 네슬레, 카길 등 식품회사에 대한 소송 제기

*source :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1, 2020, By Peter Whoriskey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0/12/01/cocoa-supreme-court-child-labor/>

Business

Supreme Court weighs child-slavery case against Nestlé USA, Cargill

Despite years of promises by the chocolate industry, child labor remains widespread on cocoa farms



Children from Burkina Faso take a break last year on a cocoa farm near the village of Niandby, Ivory Coast. (Sahar George/The Washington Post)

By Peter Whoriskey
Reporter
Dec. 2, 2020 at 4:45 a.m. GMT+9

The Supreme Court heard arguments Tuesday about whether U.S. chocolate companies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child slavery on the African farms from which they buy most of their cocoa.

Six African men are seeking damages from Nestlé USA and Cargill, alleging that as children they were trafficked out of Mali, forced to work long hours on Ivory Coast cocoa farms and kept at night in locked shacks. Their attorneys argue that the companies should have better monitored their cocoa suppliers in West Africa, where about two-thirds of the world's cocoa is grown and child labor is widespread.

criteo. 광고
광고 신고하기
Ad choices ▶

✎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ESG

유럽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EU 역내 기업들에 Supply Chain에서의 노동환경 등 실사를 강제하기 위한 법령 제정 중

- 2017년 기준 2,500만 명 이상이 아동노동, 강제노동 피해
- 기업들에게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요구
- 거래기업이 환경, 인권, 근로조건 등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실사할 의무를 부과
- 거래기업이 환경, 인권, 근로조건 등의 침해, 위반이 있는 경우 Supply Chain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음

BRIEFING



Towards a mandatory EU system of due diligence for supply chains

SUMMARY

The growth of international supply chains has undoubtedly brought enormous benefits to developing countries, but at the same time it has had certain negative impacts, relating for instance to violations of human and labour rights, including forced labour and child labour, environmental damage, land grabbing, and corruption. Multinational companies have gained unprecedented power, creating asymmetries in relation to weak regulation and enforc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For several decades, multinational companies have been encourag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supply chains on a voluntary basis. Whereas in some sectors, where violations have been most egregious, particularly in the extractive industries or in timber extraction, mandatory frameworks have already been adopted at EU level, for others it was hoped that the voluntary approach, guided by several international frameworks, would suffice.

*source : European Parliament Think Tank, 22-10-2020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html?reference=EPRS_BRI\(2020\)659299/](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html?reference=EPRS_BRI(2020)659299/)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ESG

지배구조

자본의 이동 → 지배구조 개선 요구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ESG

예 엑스모빌에 온실가스 감축 요구

- 국제 펀드들이 엑스모빌과 같은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유사업을 줄이라고 하는 등 ESG 경영 요구

"ESG 경영하라"...엑스모빌 저격한 행동주의펀드

입력 2020.12.08 17:21 | 수정 2020.12.09 02:57 | 지면 A15

美 행동주의 펀드 엔진버원
엑스모빌에 "석유사업 줄여라"
재생에너지 전문가 선임도 압박

헤지펀드 'ESG 경영' 감시 강화
온실가스 감축 방안 요구 잇따라
작년 기후변화 주주 결의안 75건
6년새 4배 넘게 늘어 '사상 최대'

'행동주의 투자(activist investment)' 베테랑들이 '친환경 에너지 트렌드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며 미국 에너지기업 대표 격인 엑스모빌을 겨냥하고 나섰다. 최근 세계 각국이 30~40년 안에 '탄소중립(넷제로)'을 이루겠다고 잇따라 공언하는 가운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월가 투자자들의 대책 요구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라"

*source : 한국경제신문, 2020.12.08., 선한결 기자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120865561>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ESG

예 국민연금

- ✓ 국민연금법에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
- ✓ ESG문제 기업에 대하여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검토하는 등 ESG를 강화하는 추세

✏️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ESG

예 Supply/Value Chain에서의 노동 이슈

- VF사의 강제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리아, 신장 위구르 지역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공급망에서 제한하려는 행동

*source : VFC 홈페이지
<https://www.vfc.com/sustainability-and-responsibility/resources>
<https://d1io3yog0oux5.cloudfront.net/vfc/files/pages/vfc/db/436/description/2021+Cotton+Fiber+Sourcing+Policy.pdf>



VF Corporation Policy on Cotton Fiber Sourcing

Certain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have imposed economic sanctions measures or other restrictions under the Export Controls and Sanctions Rules that impact cotton sourcing. Internal controls are established to comply with these laws. To uphold compliance with legal requirements in all areas where VF operates and our commitment to responsible sourcing, VF Corporation's Policy on Cotton Fiber Sourcing strictly prohibits the use of cotton grown in:

- Syria
- Turkmenistan
- Uzbekistan
-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 ("XUAR")

VF acknowledges the complexity of the global cotton supply chain and recognizes the challenges suppliers face when tracking the cotton origin and flow through each stage of their cotton supply chain. Nevertheless, we require suppliers to follow the steps below to ensure that no cotton from these countries or regions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VF Corporation's or VF brands' products.

ESG 경영을 통한 선제적 Risk 관리

- 협력업체에게 ESG 경영 요구!
- 경영 증빙자료 요구!
- 협력업체에 대한 공정거래관행 확립!



- ☑ 대기업은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ESG 경영을 요구하는 등 **공급망 내 모든 참여자들의 ESG 경영을 요구할 것**
- ☑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공급망에서 배제

ESG 경영정책 수립!

중소기업

- ✓ ESG 경영정책 수립 및 실행
- ✓ 선제적인 ESG 환경구축으로 경쟁력 확보 필요

ESG는
Follower 기업에게는 **restriction/nontariff barrier**,
Leader 기업에게는 **big chance**

환경 Environmental

- ☑ 기후변화, 자원고갈, 삼림파괴, 폐기물/자원순환, 환경오염, 화학물질 규제

사회 Social

- ☑ 인권, 강제노동, 아동노동, 근로조건, 근로관계, 보건/안전/중대재해, 소비자보호, Supply Chain

지배구조 Governance

- ☑ 주주권보고, 이사회 다양성/구조, 이해충돌방지, 부패방지, 자금세탁, 조세회피, 정보보호

다양한 국제협약과 국내 법령에
ESG의 주요 법적 이슈들이
반영되어 규범화되고 있음

환경(Environmental) Issues

Issue	법령
기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대기관리권역법 • 파리기후협약, 환경개선비용부담법,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Framework(2019)
자원고갈	<p>대기/물/토양환경보전법, 해양생태계법, 자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보전법, 친환경선박법, 친환경산업법, 친환경자동차법, 친환경농어업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신재생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p>
폐기물/ 자원순환	<p>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p>
환경오염	<p>환경범죄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p>
화학물질규제	<p>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사전통보승인조약</p>

사회(Social) Issues

Issue	법령
인권	사회보장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직업안정법 ILO 핵심규약
강제노동 아동노동	근로기준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보호등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근로조건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보호등에관한법률, 고용정책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근로관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복지기본법
보건, 안전,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소비자보호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Supply Ch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Conflict Minerals, Timber 산업에서의 due diligence (T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995/2010) • Supply Chain에서의 due diligence 시행 (EU Directive 제정 중)

지배구조(Governance) Issues

Issue	법령
주주권보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사회	상법, 자본시장법
이해충돌방지	상법, 자본시장법
부패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1977) • OECD 부패방지협약(1997)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1998) • UN 반부패협약(2003)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
자금세탁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마약거래방지법, 외감법 등
조세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rective (EU) 2016/1164, 2017/952 OECD BEPS • Tax Cuts and Jobs Act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데이터 3법), 생명윤리법, 의료법, 스마트도시법, 위치정보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GDPR

(환경)환경규제법령 관련 대응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 ☑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폐기물 불법처리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 기본 법률상 처벌에 더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

(사회)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대응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

중대산업재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등의 재해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제조, 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등의 재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의무 준수에 유의**

(사회)인권 · 노동분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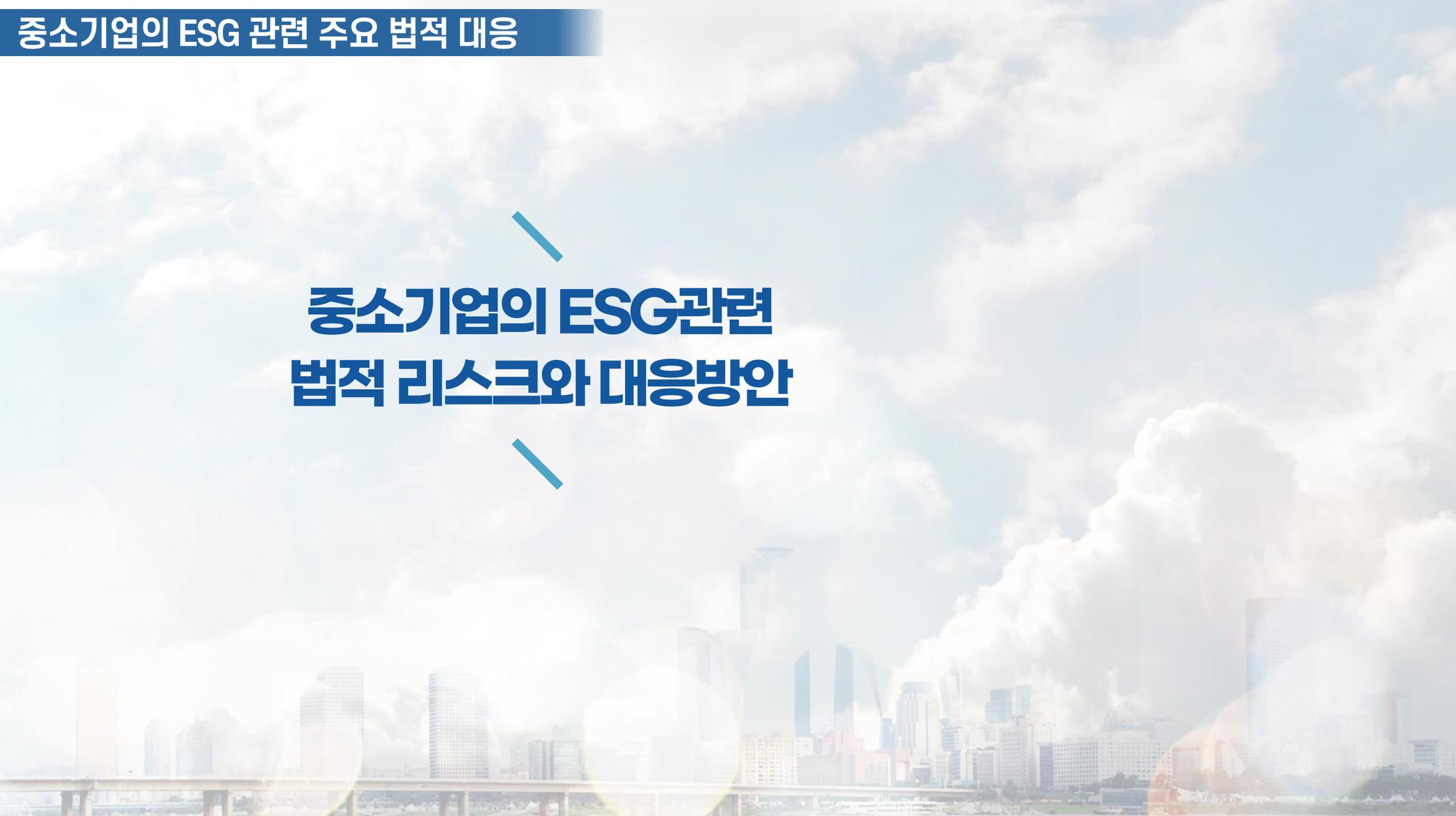
**외국인 노동자 관련 불법취업/
차별, 근로조건 미보장 등 예방**

(사회)소비자 보호관련 대응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형사처벌 및
소비자단체소송 등 불이익 대비

**(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업공시 관련 대응**

기업공시제도의 강화,
상장회사의 경우 허위공시로 인한
처벌 및 불이익 대비



중소기업의 ESG관련 법적 리스크와 대응방안

대기업과 국제거래를 포함한 공급망에서 ESG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현실적 어려움은 크지만,
중소기업도 단계적 시행 등 철저 대비
필요